

에너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연탄) 조정

- 도시가스요금은 인하하고, 전기요금과 연탄가격은 인상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를 통한 수급 안정 및 재정부담 완화, 적정의 투자보수율 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연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 법정 부담금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평균 76.54원/KWh에서 78.14원/KWh로 2.1% 인상하고,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최근 유가 안정 및 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결과 등을 반영하고 동절기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07.1.1일부터 평균 522.53원/m³에서 501.8원/m³으로 4.0% 인하하며, 연탄가격은 장기간 가격 동결과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연탄소비 급증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및 재정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300원/개에서 337원/개로 12.3% 인상(공장도가가격 기준 184원에서 221원으로 인상)키로 하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동절기가 지나 연탄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2007.4.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탄 가격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분만큼 연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심야전력, 가로등용 위주로 인상함으로써, 용도간 격차완화를 통한 소비자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용은 4.2% 인상하되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은 동결하는 반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을 각각 4.9%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너지정책)

올해부터 핵융합 에너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연구원으로 명패를 바꾼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는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 =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이 11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 = 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 개인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 금지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가 지원으로 연구성과가 발생했으므로 개인 명의의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금지된다.

▲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원으로 개명 =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소속이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술연구회로 변경되고 명칭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바뀐다.

▲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 =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 미인증 및 개조·변조·복제기기 관련 처벌 강화 = 미인증 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와 판매자는 물론 미인증 기기를 무선국에 설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증받은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와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한 자, 무선국에 설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에너지 다소비업자 에너지 진단 의무화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내년 1월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에너지 손실요인의 발굴과 개선을 도출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매각 = 종전까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 현재까지는 산업기술단지 내에 공장의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제한에 특례가 허용돼 산업기술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도시형 공장으로서 허용대상이 한정되고 공장면적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로 제한된다.

▲ 기술거래사 등록기관 변경 = 기술이전촉진법이 아직 공

포되지 않았으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는 기술거래사의 등록기관이 기술거래소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뀔 예정이다.

▲ 공공기술의 체계화 촉진 = 공공기술을 기업에 현물 출자할 경우 지금까지는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내년 6월께부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할 것으로 인정된다.

내년 한전 설비투자 예산 4조5216억원

한전, 26일 이사회서 내년 예산안 확정...올해보다 6340억원 증가

내년도 한전의 설비투자 총 예산이 4조5216억원으로 확정됐다.

송·변전과 배전설비 투자액은 다소 늘었지만 업무설비 예산이 소폭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16.3% 증가했다.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은 12월 26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35조9721억원(자금예산)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중 전력설비 투자 등에 쓰이는 자본예산안을 설비별로 보면 송·변전설비 투자액은 1조8062억원으로, 올해(1조5729억원)보다 2333억원(14.8%) 늘었다.

배전설비 예산도 올해 1조7833억원보다 1678억원(9.4%) 늘어난 1조9511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업무설비 부문은 올해(3657억원)보다 203억원(5.6%) 줄어든 3454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비 합계도 총 4조1027억원으로, 2006년 3조7219억원에 비해 3808억원(10.2%) 늘었다.

한전은 여기에 투자자산 4089억원, 예비비 100억원 등을 합치면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총 자본예산은 올해 3조8876억원보다 16.3%(6340억원) 증가한 4조5216억원이라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송·변전설비 부문은 154kV송전선로 건설 공사가 늘어나면서 투자예산이 늘었고, 배전부문도 154kV 공사와 연동된 배전설비 투자와 지중화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올해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전, 공기업 최초 『옴부즈만 대상』수상

- 행정기관과 경합하여 공기업 최초 수상 -

한국전력은 지난 12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행정이 가장 우수한 기관에 제 수여하는 ‘옴부즈만대상’을 공기업 최초로 수상했다.

옴부즈만 대상은 옴부즈만 문화 확산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된 국가 민원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전국 584개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옴부즈만 대상은 주로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수상해 왔으며, 이번에 공기업 최초로 한전이 수상하게 되는 것이다.

□ 주요 공적내용

- 고객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는 창구로 신문고,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민원업무처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 『판매SI 시스템』과 『고객(통합콜)센터』의 전사적 확대로 민

원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

- 외부전문가 중심의 다양한 민원조정위원회 및 사내전문가를 대상으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 역할담당 간부 지정 등을 내실 있게 운영.
- 경영혁신·윤리경영 및 친절응대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고객응대능력 제고와 고객의 Needs를 파악하여 고객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 전국적인 사회봉사단 운영 및 장애인 등 복지할인제도 시행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권익보호 활동 전개.

이웃돕기 현장에서 출발하는 에너지복지

- 에너지재단 공식 출범 -

4급시각장애인이면서 오른쪽 다리도 불편한 한○○ 노인(70)은 노환으로 집에서 시름시름 앓는 부인을 위해 겨울 칼바람을 이겨내며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한다. 10평 남짓한 집은 가스보일러가 고장나 늘 냉골이지만 병석의 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프로판 가스스토브를 달아놓은 것이 고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주차관리원 일당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씨 부부에게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보일러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다. 몇 달만 버티면 따뜻해지겠지라며 위안하면서 노부부는 추위를 참아가며 생활하고 있다.

한씨 부부는 매년 이웃돕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있어 겨울을 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보일러 교체와 집수리라는 색다른 선물을 받게 됐다.

산자부가 내년도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한씨 가구를 난방지원 시범가구로 선정하고, 26일 장관과 직원들이 일일봉사 활동을 통해 보일러교체 등 일체의 난방시

설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도 낮은 집을 함께 수리해준다.

* 지원대상 가구선정은 영등포구청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 해비타트에서 선정

이날 자원봉사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및 직원, 에너지재단 이세중이사장과 고희범 사무총장 및 직원, 한국해비타트 자원봉사자 등 총 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08:00~18:00까지 보일러 교체와 집수리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재단과 함께 난방지원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빠르면 2월중 지원신청자를 공모하여, 5월중 본격 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 2007년중 9,000~11,000가구 지원 예정(정부예산 100억 원 예정)

내년 1차년도 사업에서는 우선, 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가구중 취약가구(노인,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고효율 보일러교체 또는 개보수, 창호·단열공사 등 포괄적인 에너지이용 효율개선사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2월 26일에는 “에너지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공급기업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에너지재단이 여의도 한전 남서울전력관리처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1.28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향후 10년 이내 에너지빈곤층 해소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재단과 민간 정부간 에너지복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관공동의 에너지복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첫 번째 사업으로 '07년부터 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의 고효율 난방시설 보급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한다.

전력신기술 인증서 수여

대한전기협회는 12월 28일 평일·한백·한전이 공동개발한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배전선로 무정전공법(47호)'과 신우디엔시·일렉컨설팅이 개발한 'CNCV 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48호)'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

전력신기술 47호는 공압용 단상 엘보접속재 활선개폐장치와 3상 동시 활선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무정전공법으로, 앞으로 3년동안 신기술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전력신기술 48호는 케이블 동심중성선 비일관 공동접지 기술로, 역시 3년동안 기술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전력신기술 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력시설물 공사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관련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